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 및 관할행정구역 설정 관련 「자문연구단」 제1차 워크숍

- 행정도시의 기본성격을 규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
- 행정도시의 법적지위 및 행정구역 설정의 '시기상조론·졸속결정론' 및 '정치논리 및 지역이기주의'를 경계
- 전국적 차원의 전문가그룹 참여를 통한 공론의 장 마련으로 충실한 논의 및 체계적 논리구성성을 위한 단초 마련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은 충청남도의 후원으로 지난 12월 12일 오후 3시부터 본원 회의실에서 육동일 대전발전연구원장(한국지방자치학회), 배준구 경성대 교수(한국지방정부학회), 안형기 건국대 교수(한국정책과학회), 임경수 성결대 교수(한국도시행정학회), 최근열 경일대 교수(전 대한지방자치학회) 등 전국 차원의 전문가 13인과 김용교 충남도 행정도시건설지원단장을 포함한 다수의 관계관을 초청하여, 최병학 박사(주관기관 책임자)의 진행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지위 및 관할행정구역 설정 관련 자문연구단] 제1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은 ▲김용웅 충남발전연구원장 개회인사 ▲상견례 및 자문연구단 워크숍 개최취지 설명 ▲발제 및 토론 順으로 진행됐다.

이날 ▲제발제에 나선 육동일 원장(대전발전연구원,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및 설정방향" 발제를 통해 행정노시는 고유업무와 행정수요가 있는 만큼 행정특례를 둘 필요가 있다며,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행정도시 특례에 대한 법률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2발제에서 이창기 교수(대전대 행정학과, 차기 서울행정학회장은) "행정도시 건설·관리 거버넌스상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 논의" 발제를 통해 행정도시는 법적지위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지방일선행정기관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되며, 행정구역은 행정도시의 배타적 권한행사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공간적 경계를 확정하는 만큼 많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3발제에서 소진광 교수(경원대 도시행정학과, 차기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행정도시의 법적지위 및 행정구역 설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 발제를 통해 행정도시는 신행정수도와는 다른 각도에서 법적지위가 논의되어야 하며, 도시의 본질적 기능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주변지역과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담보하는 동시에 지역주의로 지방자치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되고, 기존 행정중심도시의 사례를 근거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4발제에서 김순은 교수(동의대 행정학과,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은) "행정도시 법적지위 및 행정구역 설정 관련 대안별 평가 및 시사점" 발제를 통해 행정도시의 법적지위 결정은 지방분권의 기본정신에 충실하고,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할 것이냐는 향후 행정도시의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행정도시 건설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검토하는 한편 행정도시의 정치적·법적 위상을 인구유입 증가시기 등을 고려,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5발제에서 권경득 교수(선문대 행정학부, 한국공공행정학회장은) "행정도시의 관할행정구역 설정 관련 연기군 잔여지역의 해결방안" 발제를 통해 연기군 잔여지역의 해결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중 연기군 전지역이 행정도시로 편입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 경우 공주시 편입지역과의 관계설정 등을 고려해야 하고, 주변지역인 충북 청원군 지역과의 관계도 감안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